

〈제 649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범죄피해자 지원 성금 1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광주경찰청에서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천 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준철 광주경찰청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한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 지역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기아 광주공장

#### ◆ 남구 독거노인 위해 1천만원 기부



기아 광주공장 박래석 공장장은 지난 16일 남구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광역푸드뱅크는 기부금 1,000만원으로 상차림 세트, 한과, 즉석밥 등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작해 남구에 전달했으며, 해당 선물세트는 관내

17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100가구에 제공됐다.



## 금호타이어

### ◆ '엑스타 HS52' 유럽 출격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의 최신형 타이어 제품 '엑스타 HS52'(Ecsta HS52)가 유럽에 출격한다. 14~18인치 등 46개 규격의 전 차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크기로 제공할 예정인 이번 제품은 한국과 유럽 테크니컬 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이다.

엑스타 HS52는 국내 R&D 센터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뢰어펠덴-발도로프에 위치한 금호 유럽 테크니컬 센터에서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승차감, 핸들링, 제동 거리 등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경 썼다. 특히 젖은 노면에서 제동력이 강화됐으며 이전 모델인 HS51에 비해 내구성이 30%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 디케이

### ◆ 결혼이주·다문화가정 후원물품 전달



디케이(회장 김보곤)는 지난 16일 광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광산구 관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용품(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김보곤 회장은 “풍요롭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공동체 문화를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제5차 자문위원회 개최〉



본회(회장 김봉길)는 지난 16일 제5차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성수)를 광주하이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경충 사무국에서 지난 4차 자문위원 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조치 경과보고와 함께 2021년 3분기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요

조찬포럼 및 광주경충 주요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경충은 현재 자문위원 회의를 매분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해 사업과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위원의 회원사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사무국 일지(9.13 ~ 9.17)

9.13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제3차 노사민정 실무위원회</li> </ul>	9.16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공단 재정지원 심사</li> <li>● 제5차 자문위원회</li> <li>● 고용센터 사례관리협의체</li> </ul>
9.15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GM 양산 1호차 생산기념 행사</li> <li>● 전남지노위 화쟁회의</li> <li>● 산학연 산학협동포럼</li> </ul>	9.17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29회 금요조찬포럼</li> </ul>



### 〈제1529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황태규(우석대학교 교수) 주제: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9월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란 주제로 제1529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은 2019년에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여기에 가입했다는 것은 독자적인 국내외 시장을 갖춘 경제대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대국이 되려면 강력한 군대와 종합적인 산업체계,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는 혼란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가파른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을 했으나, 소득불균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세대마다 가치관의 차이도 큰 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회통합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다. 현실적으로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의식수준은 개발도상국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고려 역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았으니 개방성과 포용성이 있는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고려의 첨단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보 IT(고려 금속활자), 바이오 BT(고려인삼), 문화 CT(고려청자)를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관련기술과 완제품을 다시 세계로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가 아시아 문명 발전의 순환축이라는 역할을 게을리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선순환 문명체계가 무너지고 그 순환 생태계에 속해 있는 주변국도 불행해진다. 한국은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며 주체세력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강대국론은 한마디로 고려성의 회복이다. 이런 한국이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인이 이룬 민주주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의 상징인 민족문화유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개방성과 포용에 관한 국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을 위한 국립 외국인 묘지를 설립하여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셋째는 강대국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제도 및 정부부처의 변화이다.





## 1. 노사 동향

### ■ 고용부는 9.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고용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보험 가입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포함

※ 산재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②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20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여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 생략

- 경총은 9. 10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이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 경총은 ①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의 전면 중지, ② 노사정이 참여하는 TF 회의 등을 통한 논의와 검토를 촉구

### ■ 고용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연장(9. 16)

-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종료(9. 30)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지원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발표

※ 특별고용지원 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 이에 따라 2021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기존 270일에 300일로 늘어남.

- 경총은 지난 9.1 고용부에 코로나19 델타변이 등으로 인해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될 경우 고용악화가 우려되므로 지원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건의」를 제출



## 2. 법제 동향

### ■ 김은혜 의원(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8)

- (발의 이유)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 촉박한 납기일 등을 고려 연장근로 실시 불가피
- (주요 내용)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되, 벌칙 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

### ■ 곽상도 의원(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8)

- (발의 이유)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
  -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
- (주요 내용)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 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 규정

### ■ 박덕흠 의원(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9)

- (발의 이유) 최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형 스피커 등의 음향장비를 동원하여



### III. 노사 및 법제동향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송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장소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들 또는 근로자들이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경우 존재

- (주요 내용)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

#### ■ 강은미 의원(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1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 보험료 등이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완 필요
- (주요 내용)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 ■ 강은미 의원(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1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공법을 변경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기단축 등 금지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는 상황
- (주요 내용)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 강화

#### ■ 강은미 의원(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15)

- (발의 이유) 노동관계법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반면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

-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에 위임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불합리가 존재하다는 지적
-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토록 변경